

쟁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구상

10개의 테제¹⁾

이동기 _ 강릉원주대 교수

1. 전제와 출발

1) 기념박물관은 ‘민주주의 기억문화’의 중심 기관이다.

국가범죄나 정치폭력의 ‘사건 현장’(crime scene)이 ‘기억의 장소’(site of memory)로 전환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지구 도처에서 진행되는 글로벌한

- 1)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민기사)’의 의뢰로 작성되었다. 민기사와 필자는 민주주의 사회의 공공기념물과 기념관 건립이 공공영역에서의 개방적인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글은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 원칙과 방향에 대해 초보적인 구상을 담고 있을 뿐이고 포괄적인 계획안과는 무관하다. 2018년 10월 중순 두 차례 민기사 책임자들과 토론 한 뒤, 2019년 4월 초 초고가 완성되었다. 그 후 다시 ‘민기사’측과 토론을 거친 뒤 2019년 5월 5일 최종본이 작성되었고 민기사에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지 ‘민기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필자와 민기사 모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여러 세부 주제와 쟁점들은 향후 더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 토론을 촉발하기 위해 쓰여졌다. 애초 원고지 227매 분량의 원본(최종본)을 『기억과 전망』의 분량 제한에 따라 150매로 줄였고 각주를 보충했다. 축약되지 않은 원본(최종본) 열람은 필자와 민기사에 문의하면 가능하다. 이 글은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및 일부 쟁점을 다루었을 뿐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정치 현상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기억문화’(culture of remembrance) 양상이다. 21세기 문명의 발전은 망상적인 미래 유토피아나 구원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거의 피 념새를 감당하며 폭력과 파괴의 재생에 맞설 버팀목을 만드는 일에 달렸기 때문이다. 인권유린과 대량살상의 ‘사건 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 정의’(historical justice)를 밝히고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기념박물관’(memorial museum) 건립이 성황을 누린다.²⁾ 국가권력의 횡포와 결합이 빚은 주민의 고통과 비극은 민주주의 사회가 발굴하고 전승해야 할 집단기억의 핵심 대상이자 ‘자기인지’(흔히 ‘정체성’이라고 말해 왔던)의 중심 내용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상처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공동체는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집단적 경험을 갖는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비극의 사회적 인지와 문화적 재현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서적 유대와 감정적 결속을 경험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런 신뢰 (재)회복과 가치 (재)전유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추

2) 이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Paul Williams, *Memorial Museums: The Global Rush to Commemorate Atrocities* (Berg Publishers, 2008); Amy Sodaro, *Exhibiting Atrocity: Memorial Museums and the Politics of Past Violence* (Rutgers University Press, 2018); Peter Reichel and Harald Schmid and Peter Steinbach (Hrsg.), *Der Nationalsozialismus - Die zweite Geschichte. Überwindung - Deutung - Erinnerung* (München, 2009); Sabine Horn and Michael Sauer (Hrsg.), *Geschichte und Öffentlichkeit. Orte, Medien, Institutionen* (Göttingen 2009); Anna Kaminsky (Hrsg.), *Museen und Gedenkstätten zur Erinnerung an die Opfer der kommunistischen Diktaturen* (Sandstein Kommunikation, 2018)을 참조하라.

상적인 규범이나 엄숙한 ‘헌정질서’로서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생명과 권리, 자유와 안전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런 합의를 창출할 수 있다. 21세기 기념박물관은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민주주의 갱신을 매개하며 ‘기억문화’를 형성한다.³⁾

‘기억문화’의 핵심 기구인 기념박물관은 과거 폭력을 다루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과제를 염두에 두며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다. 기념박물관은 단순히 비극적 과거를 재현하는 곳이 아니라 폭력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도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공역사’의 장에서 인식과 성찰의 집단 경험을 갖게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에 조응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발전시킬 역사의식과 정치문화를 형성한다.

기념박물관은 국가폭력에 맞선 정치 운동과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의 파열과 상처에 대한 기억에 기초해 인권과 자유의 의미를 갱신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 운동과 정치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 하지만 기념박물관은 단순히 ‘민주화 운동의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기념박물관 건립은 정치와 사회운동, 학문과 예술, 교육과

3) ‘기억문화’와 ‘역사문화’, 또는 ‘공공역사’ 등의 개념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및 현상에 대한 의식적인 집단기억과 공적 재현을 뜻한다. 이를테면, ‘기억문화’는 학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서술과 분석을 넘어 공동체가 집단적인 ‘문화적 실천’을 통해 과거를 현재적 목적에 맞게 재현하고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동기,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 2016, pp. 119-142;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독일연방공화국역사의 집’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 비교」, 『역사비평』 96, 2011, pp. 243-279을 참조하라.

문화 등 여러 영역의 성과를 반영하며 그것을 융합하는 기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⁴⁾

2) 과거의 좌절로부터 배우고 현재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2018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건 발생지를 기억의 장소, 즉 ‘남영동’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건립할 것을 공표하기까지 무참한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한 희생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지체와 행정적 장벽 또는 사회적 무관심을 뚫어야 했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확정도 민주화의 자연스런 결과도 아니고 선한 정치권력의 시혜도 아니다. 그것은 유관 단체들의 치열한 노력과 견고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다르게 보면, 지난 시기의 지체와 좌절은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다.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통과된 후 17년이나 지난 뒤에야 비로소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원인과 과정을 비판적으로 따져야 한다. 다시는 그런 유예와 방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결의와 합의를 밝혀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민기사의 능력 부족이나 의지 결여 탓만은 아닐 것이다.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민주인권

4) 추모지와 기념박물관의 발전 과정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정리는 Habbo Knoch, Gedenkstätten, Version: 1.0, in: Docupedia-Zeitgeschichte, 2018/11/09. (http://docupedia.de/zg/knoch_gedenkstaetten_v1_de_2018)를 참조하라. 아울러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Ulrich Borsdorf and Heinrich Theodor Grütter (Hrsg.), Orte der Erinnerung. Denkmal, Gedenkstätte, Museum (Frankfurt a.M.: Campus, 1999)을 참조하라.

기념관>의 건립과 활동을 교란할 요인들이 없지 않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주체들은 그런 교란 요인들에 맞서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건립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권력의 급격한 교체와 정치 세력 관계의 부침에 따라 <민주인권기념관>의 독립성이 위축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종류의 제도적 장치와 방어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주인권기념관>을 ‘독립’ 재단으로 만들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 재단 방식의 기념관 건립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가능할 것이다. 일단은 현재 민기사의 법적 조건과 제도적 기반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그것은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의 핵심 결정 기구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활동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인물들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 기구의 중심 역할은 당연히 핵심 사안들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맞서 <민주인권기념관>의 활동을 방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민주인권기념관>은 건립 과정에서 국내외의 기념박물관들과 논의해서 기념박물관의 기본 원칙 또는 활동방향에 대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나 선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권력의 개입이나 역사 ‘부인’(denial) 세력의 공세에 맞설 필요가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정부도 <민주인권기념관>의 운

영과 활동이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도록 ‘간섭하지 않되 지원한다’는 선언을 공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인권유린 행위를 밝히고 희생자의 존엄을 지키고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사회적으로 승화시키는 기관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인권유린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가해 행위를 변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상대화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비판적 경계를 세우고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워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일차적 의무는 그런 경향과 대결하는 것이다.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과 한국의 신종 극우 집단에서 보듯, 폭력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수용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매 시기 끊임없이 새로 형성되고 세대를 전승하며 결집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그와 같은 역사 ‘부인’ 세력들의 비방과 공세를 극복할 정치적 기반과 제도적 규정을 확보해야 한다.

2. 과정과 방식

3) 건립은 다원주의적 소통에 기초해야 한다.

기념박물관에서 국가폭력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탄을 곱씹도록 돕거나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결의를 다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넘는 과제이자 새로운 전망을 여는 일이다. 국가폭력의 기억

은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실천 행위이자 문화 전승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억문화 기구들, 특히 기념박물관은 민주주의 원칙인 개방성과 다원성에 기초해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건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강제나 압박을 벗어나야 하고 특정 정치 세력 또는 사회 집단에 의해 독점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기념박물관 건립은 폭력의 가해 현장에서 민주주의 기억문화의 소통 거점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권력 행사나 패권적 독점,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제적 규제, 소통 부재와 일방 결정, 위계와 권위로 인한 비판 봉쇄와 위축, 독선과 경쟁 과다, 상호 존중과 합의의 부정 등에 어떤 자리를 내주어서도 안 된다. 가장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소통과 결정 과정이야말로 그 곳의 희생과 고통에 답하는 일차적 전제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영역에서의 의견 개진과 논쟁을 전제한다. 주장과 반박, 논증과 설득, 대안과 타협, 조정과 합의, 유보와 미결 등은 모두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민주주의 기억문화 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단기억의 문화적 발현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하거나 민주적인 정치가들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그들이 기억문화 기구의 건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념박물관 건립과 운영에서

민주주의 정신과 다원주의 원칙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건립된 역사박물관과 기념박물관은 대개 국가 기관이나 관공서의 용역 발주 후 행정 편의에 기초한 기간에 맞춰 ‘빛의 속도’로 일방적으로 건립되었다. 또는 일부 기념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경우처럼, 오랜 ‘과거청산’ 노력이나 민주화 운동의 대의 속에서 그저 ‘건립’만으로도 의미를 부여받고 칭송받았다. 이때 공적 차원의 다양한 검토와 개방적 토론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사회적 관심 환기 과정은 무시되거나 생략되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그와 같은 건립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 기억문화 창출을 열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새로운 방식의 건립 과정과 운영을 통해 국내 여타 기념박물관의 전범을 열어야 한다.

4) 건립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을 확대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범죄 희생자 기억을 위한 국제기념박물관 위원회’(약칭 ‘국제기념박물관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morial Museums in Remembrance of the Victims of Public Crimes: IC MEMO)는 세계 여러 지역의 대표적인 기념박물관들 사이의 협의 기구다.⁵⁾ 그들은 ‘국제홀로코스트 기억동맹’(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Alliance: IHRA)과 함께 2012년 12월 말 인권유린과 정치폭력을 주제로 한 기념박물관의 원칙과 활동 방향에 대해 10개 항의

5) <http://network.icom.museum/icmemo/>

‘선언’(Charter)을 발표했다. 그것은 기념박물관이 정치적 외압과 지시에 맞서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함을 특별히 강조했다. 전시와 교육을 비롯해 사업 내용과 활동 전반과 관련해 기념박물관의 주요 결정은 ‘생존자, 학자, 교육자, 유관 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비위계적인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 과정에 필요한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다원주의적 소통의 방식과 절차는 더 명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때 결집과 동원에 익숙한 사회운동의 논리에서 나온 통합적인 ‘범국민 추진’ 방식은 피하는 게 좋다. 오히려 다원주의와 개방성의 원칙에 맞게 탈중심적이고 탈권위적으로 이견과 논쟁의 난장을 만들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민기사와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공론화’ 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 법을 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현재의 제도 규정에 따라, 민기사가 시민사회와 소통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건립하되, ‘자문기구’를 통해 건립을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민기사가 사회를 보조할 ‘건립운영위원회’를 임시로 둘 수도 있다. 하지만 민기사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아예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준비위원회(이하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때 다원주의적 소통이 꼭 ‘건립준비위원회’를 풍선처럼 확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방식이 효율적이면서 더 민주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인권기념관>과 관련한 모든 입장과

요구를 민기사 이사회 또는 ‘건립준비위원회’로 ‘수렴’하거나 ‘통합’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의 유지와 비판적 견제의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 낫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건립 과정을 보조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것과는 별도로 자문기구와 보조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기념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는 “생존자, 학자, 교육자, 유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사회위원회’ 외에 ‘고문피해자 모임’(또는 더 나은 이름으로는 ‘국가폭력 증인 모임’)과 ‘학술자문위원회’와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소통과 숙의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건립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지금까지 민기사의 ‘이사회’가 갖든, ‘건립준비위원회’(규정을 통해)가 갖든, 위의 자문기구와 보조 모임들은 ‘자문’ 역할을 맡아 ‘권고안’이나 ‘의견서’를 통해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또는 ‘교육자문위원회’를 합쳐 ‘학술교육자문위원회’)는 건립 후에도 <민주인권기념관>의 자문기구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기구와 보조 모임이 생겨도,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을 접할 수 있고 그것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민기사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관계자들만이 모인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라 언론과 학술지를 통해 논쟁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적 개방성과 소통 정신에 더 부응한다. 아울러 남영동 건물에는 설문이나 인터뷰

또는 의견 개진을 위한 홈페이지 등 여러 방식을 도입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억문화는 바로 그런 주체적인 의견 발현과 논쟁과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영역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논쟁을 진행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시민들은 저마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타인과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그와 같은 떠들썩함은 오히려 ‘잡음 없이’ 만들어진 뒤에 진행되는 그 어떤 홍보보다도 더 큰 공적 관심을 유발한다. 바로 공공영역의 정치문화와 기억문화 형성에 대한 시민들의 주체적 관심과 견해 형성 및 타자와의 소통이야말로 남영동 대공분실이 짓눌렸던 민주주의적 삶이었다. 지난 시기의 그 억압과는 정반대의 소통 과정과 문화를 선보일 기회다. ‘공론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5) 전문성을 높이고 학문적 연구에 기초해야 한다.

‘국제기념박물관위원회’는 기념박물관의 활동이 학문적 기반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립 과정도 마찬가지다. 기념박물관은 다원주의적 역사인식과 개방적 소통을 보장하고 권장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학문적 근거와 전문적 검토에 입각해야 한다. 기념박물관은 학자들과의 간담회나 단발적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청취’를 ‘학계와 소통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념박물관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립 과정에서 이미 학자들의 연구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박물관의 주요 기능은 유물과 자료 수집, 보관, 전시, 교육, 연구, 정보와 지식 제공과 공공서비스다. 그 기능들은 모두 독자적인 차원의 학문적 논의와 전문적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현대사박물관은 전시 구성과 방식 및 공공서비스와 교육과 관련한 박물관학의 여러 연구 성과와 논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박물관은 단순히 역사 유물을 수집해 그대로 비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물과 자료에 대한 정보 확보와 수집 활동, 분석과 확인, 보관과 유지, 분류와 정리, 전시로의 배치와 유보 등 모든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전시 방법과 기술도 끊임없이 혁신되어야 한다. ‘박물관 교육’도 비극적 현대사를 주제로 다시 특화되어야 한다. 인권유린과 정치폭력 교육이 역사박물관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의 문제를 놓고 특별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실험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건립 과정에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기념박물관에 대해 포괄적 연구와 정보를 확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 소통과 외국 기관과의 협력은 우리의 고통과 투쟁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의 기념박물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기념박물관과 기억문화와 관련한 국제적 학문 성과와 실천 경험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맥락에 맞게 고유한 인식 지평을 열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역사 전시와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은 ‘영어 홍보 책자’를 통한 선전보다 효과가 더 크다. 전시와 교육의 수준을 올리는 과정에서 국제 협력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한편, 학문적 논의와 전문성 강화는 기념박물관의 실천과 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어야 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건립 과정에서 상설 전시 구상뿐만 아니라 기념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유물과 자료 수집 원칙과 방향, 기념박물관 교육의 원칙과 내용 및 디지털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문서로 된 원칙 내지 구상안을 가져야 한다. 이를테면, 유물과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학문적 연구와 검토를 거친 '수집 기준과 범주'를 담은 '수집 원칙'을 따로 만들어 그것에 기초해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인습적인 학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건립 과정에서 전시와 교육 영역에 대해서 학문적 논의에 기초한 원칙과 구상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바로 그런 학문적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인권기념관>은 역사의식과 기억문화의 발전을 책임감 있게 보조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이미 말했듯이, '학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건립과정 뿐 아니라 건립 후에도 학술자문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전시와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해 의견서 내지 권고안을 제출하거나 직원들의 자문 요청에 응하며 실제 보조 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개방형 '전문가 연구 모임'(이를테면, '폭력과 기억 포럼')을 만들어 한편으로는 건립 과정의 여러 쟁점과 문제들에 대해 연구와 숙의를 지속해 건립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연구 과제와 쟁점들을 학술 영역에서 계속 확장해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

립 후에도 ‘전문가 연구 모임’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외부 연구자들과 내부 직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개방적인 방식이 좋을 것이다.

외부 학자들의 자문과 참여 외에도 민기사와 〈민주인권기념관〉 상근 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길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전시 및 교육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충원하거나 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가져야 한다. 자문 학자들과 내부 직원들이 모두 현재의 전문적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서 〈민주인권기념관〉의 전문성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제도와 조직 틀을 건립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한다.

3. 쟁점과 방향

6) 전시: 1970/80년대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하되 ‘민주화운동’을 포함한다.

2019년 현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민기사의 구상 내지 민기사 발주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지할 수 없다.⁶⁾ 상황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기념관 건립지가 ‘남영동’으로 정해졌고 기념관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연구책임자: 조희연), 2012/09.

의 기본 성격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민기사가 그 동안 마련했던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구상은 뒤로 물려야 한다. 남영동의 장소성을 염두에 두면,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 핵심 주제는 국가폭력과 인권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 1970~80년대 한국의 독재 정권이 가한 인권유린과 정치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형식과 내용을 찾는 것에서 모든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장소성의 문제 외에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전승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다른 이유들도 존재한다. 먼저, 한국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에 대해 진단과 평가는 이전보다 더 냉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화”나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다 이룬 유일한” 같은 식의 인식 전제는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런 자아도취적 평가는 지난 수년의 역전과 최근의 온갖 취약 앞에서 부끄러운 일로 남는다. 둘째, 현재 민주주의 운동의 주체와 흐름이 다양해졌고 새로운 과제와 도전이 넘치기 때문이다. 현재의 다원화된 민주주의 정치 요구와 사회 세력을 염두에 두면, 지난 시기 군사 독재나 억압 통치에 맞선 집단적 주체를 ‘민주화 세력’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단일하게 규정하며 기념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여러 지역과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기념관이 건립되는 흐름에도 유의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하나의 중심 통합적인 거대 서사를 연상시키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민주화운동” 기념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 조직화된 저항으로서의 ‘민주화운동’을 넘어 다양한 삶의 영역과 사회 부문에서 민주주의

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현 시기에 과거의 ‘민주화운동 기념’은 일부 세대와 집단의 집단적 자족 또는 ‘그들만의 특정한’ 정치적 사회화 경험을 이상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화운동’ 기념을 유보한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의 필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현실의 과제가 어떠한든, 과거의 독재에 맞서 희생을 던고 투쟁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 기억하고 전승해야 마땅하다. 특히 최근 극우 세력의 (재)결집과 비이성적 공세 그리고 ‘86세대’ 일부의 보수화와 청년 세대 일부의 동요와 혼란을 염두에 둔다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매개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 또는 ‘민주주의 전당’(또는 다른 이름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집’)은 더욱 필요하다. 오히려 오랜 ‘민주화’ 과제가 여전히 산적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과제가 계속 등장하기에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하고 토론할 역사문화 기구는 더욱 절실하다.

더구나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순히 ‘무고한’ 시민들의 삶이 파괴된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무엇보다 독재에 맞서 투쟁했던 저항 투사들이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의 장소였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기본적으로 인권유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죽음과 생존을 통한 독재의 증언과 저항의 현장이었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 기념을 비껴갈 수 없는 이유다. 고문의 피해자들이 고통이나 절망을 겪은 희생자들로만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사회를 억압할 때 맞서 싸웠던 사람”⁷⁾들로 기억되고자

7) 진실의 힘/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2018, p. 177.

하는 요구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을 추진할 강력한 이유와 조건이 없기에 오히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제한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포괄하는 것은 더 적절하고 필요하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되(이를테면, 상설전시관의 3/4) 그것과 연관된 시기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운동'을 제한적으로 또는 계기적으로 (이를테면, 상설전시관의 1/4 또는 정기 기획 전시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국가폭력의 역사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구분해서 다루되 그 둘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인권기념관>의 주요 전시 대상과 주제는 -민주화 운동을 일단 제쳐두면- 크게 둘이다. 먼저,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기관과 제도의 발전과 가해자들이다. 이때 장소성을 고려해 치안본부와 경찰청이 전시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1970~80년대 남영동 대공분실과 경찰청의 조직 구성과 체계가 주요 주제 영역이 된다. 전국에 산재했던 경찰청의 조사실과 고문 현장은 모두 상세히 알려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인권기념관>이 대공분실과 경찰청의 역사에만 한정할 이유는 없다. <민주인권기념관>은 1970/80년대 여타 폭압기구들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남영동' 고문과 폭력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사'와 '후사'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편, 제도와 조직의 역사만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과 행위자들이다. 기념박물관은 정치 폭력 가해자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가

해자들을 명료히 드러내야 한다. 전시는 인권유린과 고문뿐만 아니라 체포와 조사, 감시와 통제를 비롯한 모든 억압과 가해 행위를 밝혀야 한다. 이때 그들의 행위가 다만 ‘상부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호를 비판할 수 있는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가해자들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 동기와 가해자로서의 형성 과정 및 집단적 사회화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 가해자들을 그저 ‘악마’로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데 무익하다. 둘째,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죽음과 고통과 파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생애사의 관점을 반영해 트라우마와 비극, 생존과 저항과 연대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기술과 방식에 대해서도 숙고와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인습적인 방식의 ‘벽장형 전시’와 계몽적 설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진시품을 사면이나 양면 벽의 유리관에 박아 두어 거리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선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방문객이 전시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전시 설명은 철저히 사료와 학문적 연구에 기초하되 역사책을 펼친 듯 한 과도한 설명 방식은 피해야 한다. 디지털화와 영상과 청취 도구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시 주제와 내용뿐 아니라 전시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제 기념박물관의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장소: ‘역사 현장’은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의 현장은 ‘기억의 장소’로 보존되고 동시에 역사 전시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먼저, 기념박물관은 인권유린의 가해 현장에서 건립되기에 ‘역사 현장의 보존’은 기념박물관의 기본 임무에 해당된다. 국가범죄의 현장은 사건 직후부터 이미 폭력의 가해 기구나 범죄 책임자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변조되거나 은폐되기 쉬웠다. 그렇기에 아직 남겨진 현장의 보존은 기념박물관의 일차적 존재 이유다. 기념박물관은 따로 전시를 통해 역사를 보여주기 이전에 이미 공간과 장소와 건물과 사물을 보존함으로써 역사를 전달한다. 사람들이 장소와 공간을 기억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장소와 공간은 그 자체로 이미 기억을 생산하고 전승한다.

국가범죄와 정치폭력의 현장은 ‘사실성’(authenticity: 진정성)의 보고다.⁸⁾ 가해 현장에 건립되는 기념박물관은 그 사실성에서 출발한다. 사실성은 고유하고 특별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근원적이고 순수하며, 진실하고 충실한 인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먼저, 가해 장소와 공간과 건물은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다. ‘악마의 시간’은 지났지만 그 시간을 증명하는 ‘악마의 공간’은 남아있다. 사건의 장소는 희생자의 마지막 생존 공간이자 살해 현장이기에 희

8) 사실성 개념에 대해서는 Achim Saupe, “Authentizität”, Docupedia-Zeitgeschichte, 2012/10/22. (http://docupedia.de/zg/saupe_authentizitaet_v2_de_2012).

생자 유족들에게는 ‘보존’되어야 할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고문 피해자들의 경우, 장소와 공간과 건물을 모두 동일하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의 트라우마를 겪는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건물과 공간은 여전히 불편하고 감당하기 힘든 곳이다. 그들은 역사 현장의 사후 ‘정리’를 요청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장소와 공간과 건물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인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가해 공간과 건물은 이성적인 지식 전달이나 설명으로는 창출할 수 없는 감각의 경험과 감정의 동요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이 인권유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핵심 이유는 역사 현장이 빚어내는 ‘아우라’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다. 즉, 특별하고 강렬한 ‘진짜 과거’의 고통과 비극에 몸과 마음을 침잠하려는 요구가 존재한다. 기념박물관은 그것에 적극 조응해야 한다. 감정의 순도와 진실성이 흐려진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가해 현장은 타자의 고통과 아픔에 ‘진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 공간이다.

셋째, 가해 현장의 사실성은 자신의 생애사나 가족사가 그 역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가 낫설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과 이주민들에게도 역사로 들어가는 통로를 제공한다. 가해 현장의 아우라와 사실성은 누구에게나 과거 사건의 무게를 전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며 성찰의 기회를 던진다. 특히 그것은 온갖 종류의 예술적 재현, 즉 복제와 모방과 가공을 통한 추상적 상상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물질적 경험과 감각을 통해 과거에 직접 접촉하도록 만들고 범죄와 고통에 대한 구체적 인지와 주체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사건 현장은 국가범죄의 변호에 맞서 가해 범죄의 사실성과 심각성의 물적 '신뢰'를 강화한다. 사건 현장은 가해자들과 역사 부인 세력의 거짓과 왜곡, 변명과 정당화를 논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물적 근거다. 장소와 건물은 가해 행위 과정에 대한 구체적 판타지를 가능케 만든다. 장소와 건물은 가해를 위한 목적으로 그 물질적 공간이 실제 사용되었음을 명료히 지시한다. 그것은 사실성의 신용과 권위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의 사회적 합의와 도덕적 무게를 강화한다.

그런 이유로 기념박물관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은 '역사 현장'의 보존과 복원이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공유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기억의 공간으로 남은 역사 현장은 기본적으로 '원형'(original condition)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해 행위 후에 가해자들이 공간과 장소와 건물을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추후에 기억의 장소로 만들도록 남겨진 상태는 '원형'이 아니다. '원형보존'이라고 말할 때의 그 '원형'이 가해 공간과 건물이 건립된 때의 모습인지, 주요 사건의 발생 시점의 모습인지, 아니면 최종 인수 시점 상태의 모습인지는 언제나 불분명하다. 게다가 주요 사건들의 발생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면 '원형'을 확정짓는 것은 더욱 어렵다. 각 시기별 '원형'들이 파편적으로 병존할 때 어떻게 '원형'을 보존하고 복원할지는 매우 난감하다. 순수한 의미의 '원형'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사건의 양상과 공간의 모습을 '원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삼는 '원형보존'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 이미 가해자들의 건물과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소와 부지는 변화를 겪었다. 주변 환경도 변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사라진 ‘원형’을 보존하기도 어렵고, 방문객을 위한 ‘기억의 장소’로 만들면서 그것을 다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고문 행위의 실제 공간과 장소는 현재의 ‘보존’ 상태처럼 그렇게 깨끗하거나 정돈되어 있지도 않았고 조명과 온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실제 사건을 겪은 역사 증인들은 그 장소와 공간이 ‘당시’와 ‘지금’ 얼마나 다른지를 금방 말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사건 당시의 ‘원형’대로 만드는 것은 방문객을 맞이할 기념박물관에는 부적당하다. 기념박물관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장소와 공간과 건물은 다시 구성되고 재현되고 창출되어야 한다.⁹⁾

둘째, ‘역사 현장의 보존과 복원’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들의 행위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을 갖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고통과 죽음에 직결된 곳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유린과 폭력을 준비하고 실행한 공간과 건물은 조사와 연구와 검토를 거친 뒤 최대한 ‘역사 현장’으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 현장’의 모든 장소가 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주요 기념박물관은 ‘역사 현장’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재현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가해 행위와 피해가 발생한 공간에 집중한다. 기념박물관의 기본 임무인 ‘역사 현장의 보존’을 곧장 ‘모든 역사 흔적의 원형보존’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9) 이에 대해서는 Ralph Buchenhorst, “Ding und Gedenken. Marterialität und Authentizität in Erinnerungskulturen”, Herbert Kalthoff and Torsten Cress and Tobias Röhl (Hrsg.), *Materialität. Herausforderungen für die Sozial- und Kulturwissenschaften* (Paderborn: Wilhelm Fink, 2016), pp. 153-167.

1990년대 독일과 유럽에서 홀로코스트와 공산주의 독재의 가해 현장을 기념박물관으로 만들면서 등장했던 ‘원형’ 개념은 학문적 논의 과정에서 뒤로 물러졌다. 오히려 ‘원형’ 보존과 복원의 불가능성 또는 ‘원형’(유지)에 대한 망상의 극복이 그 후 기념박물관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대신 ‘역사 현장의 보존(preservation of the historic sites)’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희생자의 장소와 방문객의 장소 사이의 간격과 차이”(알라이다 아쓰만 Aleida Assmann)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¹⁰⁾ 오히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인지함으로써 방문객은 역사의 사실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스스로 고유한 판타지를 갖는다. 그 말은 역사적 장소를 방문객을 위해 무조건 변조해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건 현장을 ‘기억의 장소’로 만들 때는 그냥 가해자들이 남긴 현장을 ‘원형’으로 여겨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역사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뜻할 뿐이다. 가해자들이 남긴 것을 ‘그대로 두는 방식의 원형 보존’이 아니라 그 장소를 ‘역사 현장’으로 보존하고 복원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후의 ‘문화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건 당시 현장이 ‘원형대로’ 그대로 재현되거나 전승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그 곳에서 기념박물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역사 장소’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것과 새로운 용도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10)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 H. Beck, 2018), p. 334.

것은 ‘테니스장 부지’의 활용 여부와 방식이다. 위의 ‘역사 현장’ 논의에 기초한다면 테니스장 부지를 현 상태로 그대로 ‘보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추진위’의 주장, 즉 ‘가해자들이 테니스를 치며 체력 단련을 했던 곳이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논거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단 그 장소가 가해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테니스장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테니스를 정기적으로 쳤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아야 한다. 일반화와 익명화는 피해야 한다. 설사 남영동 대공분실의 핵심 가해자인 박처원과 이근안 및 고문 가해자들이 테니스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가해 행위와 관련되지 않고 그 장소가 직접 가해의 맥락을 두텁게 갖고 있지 않다면, 테니스장 부지를 꼭 ‘보존’할 이유가 없다. 만약 ‘체력 단련을 위해 테니스를 친 곳이니 보존’ 같은 식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남영동의 모든 공간은 현 상태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남영동 공간은 전부가 ‘가해자의 공간’이기에 그들의 일상적 삶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가해자들이 향유하고 사용한 모든 공간과 시설이 곧장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테니스장 부지를 내세워 가해자들의 야만성을 부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국제 공공범죄 희생자 기념박물관 위원회’는 10개항선언에서 가해자들을 ‘악마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의 행위 동기와 집단 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맥락과 상황을 더 잘 알고 다 많이 알아야 그 가해와 가해자들을 더 세게 비판하고 더 분명히 경계할 수 있다. ‘악마성의 적나라한 폭로’는

기념박물관에서 오히려 극복해야 할 관점이다. 하지만, 설사 악마성과 야만성의 폭로가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져도 테니스 장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정상화’나 ‘상대화’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가해자들의 옛 흔적과 공간을 무조건 ‘보존’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장소와 공간을 ‘정역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테니스장 부지가 ‘그대로 보존’되면, 현재의 공간 조건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은 기획전시관과 교육관 및 여타 공공서비스 시설은커녕 상설 전시 공간과 심지어 추모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향후 ‘가해자 연구’를 통해 그들의 생애사를 다각도로 전시에 담고 교육의 주제로 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들의 생애사와 일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테니스장 부지 보존’보다 더 복합적으로 가해자들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 전시와 교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부지 보존에 고착해서 〈민주인권기념관〉의 물리적 활용 공간을 축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전시 공간을 비롯한 여러 목적과 용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테니스장 부지는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인권기념관〉은 단순히 과거 재현의 공간이 아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역사 학습의 장이자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어야 한다. 그런 기능을 실천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테니스장 부지에 어떤 형태로든 건축물이 들어서야 한다. 그 신축 건물은 김수근의 건물과 대비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이를테면, 야만과 문명, 억압과 개방, 고문 현장과 인권 학습장의 극명한 대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같은 규모로 7층 건물이 들어서면 좋을 것이다. 김수근의 건물과는

정반대의 건축 구상과 철학을 반영하는 것, 즉 가장 개방적이고 인도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추모: 추모 조형물과 공간을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한다.

기념박물관은 전시와 교육 공간 외에도 추모와 성찰의 공간이 필요하다. 남영동은 살해 현장이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이기에 고문의 희생자들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저항 투사들을 위한 추모 조형물과 추모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준비와 논의도 시급하다. ‘추모 조형물’은 남영동의 고문 희생자(고문 후유증 희생자 포함)들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추모의 과잉을 통한 염속과 비장함은 피해야 하고 장소의 역사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1970~80년대 국가폭력의 여타 희생자(남영동의 희생자가 아닌)를 위해서는 추모조형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와 기억 공간이 (어떤 식으로)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보아야 한다. 이때 민주화 운동의 대의나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부채감 같은 것보다는 거듭 민주주의 기억문화의 창출과 세대 전승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추모 조형물과 추모(및 기억) 공간이 희생자 또는 피해자들(의 일부)을 특권화하고 위계화거나, 영웅화하고 이상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남영동 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모든 고통과 죽음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각기 모두 고유한 가치와 무게를 지닌다. 죽음과 고통을 경쟁시키고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을 위계화해 구분하고 배제하는 모든 방식은 남영동 가해자들의 삶의 논리와 방식을 무심결에 받아들이는 셈이다. 또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분명 역사의 무게를 버텼던 ‘영웅’이었다. 하지만 ‘영웅화’ 방식의 추모와 기억은 일부 방문객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거리감과 불편함, 또는 거부감을 낳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추모의 형식과 방식 및 조형물과 공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숙고하고 논의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 주체들은 추모 조형물과 추모 공간의 필요와 방식에 대해 토론한 뒤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문가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정하게 의견이 모이면, 추모 조형물과 공간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조형 건축가와 예술가들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 연고를 통한 임의적 결정은 피해야 한다. 특히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경쟁이 낳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공모 당선작들을 놓고 다시 토론하며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추모 조형물과 추모 공간에 들어갈 문구를 정하는 과정도 개방적이고 소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남영동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과제를 열어 그들이 공개경쟁(공모 절차)에 참여하고 다시 집단 토론을 통해 함께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그 예다. 또는 학교나 소모임 단위의 청소년들에게 4-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추모와 기억과 관련된 여러 문구들 내지 문학적 예술적 표현들을 창안하도록 하는 방식도 좋다. 추모물과 추모 공간의 문구와 보조 장

식을 그들의 작품으로 채운 뒤, 6개월이나 1년 마다 계속 공모와 공론 절차를 통해 갱신 내지 축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은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 과정에 청소년 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한 방식이다. 그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그 결과물이 자신들의 세대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은 공명을 낳는다.

9)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기념박물관의 추모와 기억은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시민교육의 너른 마당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존재하기 어렵다. ‘국제 공공범죄 희생자 기념박물관 위원회’는 10개항 선언의 9조에 서 기념박물관이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한” 특별한 장소임을 강조했다. <민주인권기념관>이 역사 전시를 넘어 민주시민교육의 전당이 되려면 그것에 걸맞은 원칙과 방향을 가져야 한다. 먼저, 그것은 기념박물관의 교육에 대한 학문적 성과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시 부상한 ‘민주시민교육’ 논의에 조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주인권기념관>은 향후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에 기초해 ‘기념박물관의 민주시민교육 원칙과 방향’에 대해 따로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건립 과정에서부터 ‘교육자문위원회’ 내지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포럼’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 모두 기본적으로 ‘추진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경험과 인력을 포괄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단위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이 결합하도록 구성과 협력 체계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구성과 체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두 가지는 특히 중요하다.

먼저, 기념박물관은 전시 안내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역사 증인들, 즉 고문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의 증언과 토론 참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사 증인들을 〈민주인권기념관〉 교육의 한 핵심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을 단순히 역사 전시에 필요한 인터뷰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살아 있는 역사'로서 고유한 아우라를 지닌 존재들이다. 역사 증인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정보 전달자이다. 역사 증인들은 과거 사건과 상황의 '유물'로서 '물질적 사실성'을 보증한다. 역사 증인은 존재 자체로서 지난 사건의 구체적 근거이자 자료다. 역사 증인은 사건의 연쇄 고리의 일부를 구성하기에 신뢰 가능한 연관성의 보증이다. 그들은 신체적 존재를 통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과거의 흔적을 현재로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역사 기구, 특히 기념박물관은 역사 증인들의 증언을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도록 통로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다양한 주민 계층들을 포괄해야 하지만 세대 전승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청소년들과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특별한 기획과 구상을 가져야 한다. 그 기획과 구상에는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활용 자료나 배포

자료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청소년용 책자나 팸플릿만이 만화와 동영상 등의 제작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보조받기 위해서라도 교육청 또는 교사(모임)들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대학과도 협의해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 주제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와 1970~80년대 정치폭력, 민주화 운동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역사교육과 현실 비판을 결합시킨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주제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세부 영역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상설전시의 구상이 잡히면 전시의 기본 내용과 대주제뿐 아니라 전시의 중주제와 소주제 영역에 대해서도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기획전시의 경우에도 항상 전시 외에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전시 연계 교육’이다.

아울러 전시에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주제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와 관련된 수집 자료와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좋다. 오히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활용의 의미와 의의가 큰 것을 확인했다면 수집 자료들은 추후 상설전시관이 나 특별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전시와 교육의 다층적 연계를 진행하면, <민주인권기념관>은 ‘한번은 가볼만한 곳’에서 ‘다음에 또 와야지’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념박물관의 ‘교육 원칙’과 관련해서 ‘국제 공공범죄 희생자 기념박물관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원칙을 수용했다. 그 선언의 9항은 한국에도 최근 잘 알려진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원칙, 즉 ‘교화(의식화) 금지’, ‘논쟁 재현’ 그리고 ‘학습자 중심’ 원칙에 준거했다.¹¹⁾ 즉, 방문객들은 기념박물관의 계몽적 주입 또는 ‘의식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쟁 중인 주제들은 박물관 교육에서도 동시에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방문객 개인의 주제적 관점과 실천적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원칙은 국제적으로나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준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념박물관은 감정이나 감성에 직접 연결되는 체험과 행위 중심으로 교육 방향을 잡아야 한다. 체험과 행위에 주목하면, 기념박물관은 방문객이자 행위자인 학습자들의 집단 범주별 차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대와 연령별, 출신과 지식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 내용과 형식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을 향해 박물관의 디지털화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책임 방기다. 그것은 모두 인습적인 교육 방식, 즉 일방적인 안내 설명이나 독백의 강의나 주입식 수업 형식을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2년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만들어질 박물관이 1970/80년대식 획일화와 훈육이 지배하는 학교 교실의 모습을 띠어서는 안 된다.

소통과 상호작용은 〈민주인권기념관〉과 학습자 사이의 관계 양식이지

11) 심성보, 이동기, 장은주, 케르스틴 폴 자음,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2018)

만 동시에 방문객들(학습자들) 사이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다. 즉 소통과 상호작용은 <민주인권기념관>을 통해 이질적인 사회 집단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일상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면 현재의 사회적 소수자들을 적극적으로 방문객 내지 학습자로서 상호작용의 한 주체로 끌어 들일 필요가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교육 프로그램 안에 소수자들과 주류 집단이 만나 소통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제공과 소통의 혁신 그리고 외부로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은 교육과 정보 제공의 다원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정보 생산과 공유의 기술 혁신에 조응해야 한다.

그것은 모두 전문 인력과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독자 공간과 시설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강연이나 문화 행사를 위한 중형 또는 대형 실내 공간(여기서 우리는 ‘강의실’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다) 만이 아니라 소형 세미나 룸과 ‘역사작업실’(history workshop)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맞는 토론과 논쟁 및 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10-15명 안팎이 들어갈 수 있는 20여개의 투명한 소형 세미나 룸 내지 ‘역사작업실’을 신축 7층 건물의 5층에, 중형과 대형 공간을 그 건물 6층에 위치하도록 건축해 김수근과 독재의 공간 구상과 활용에 전면 대비되도록 하는 것 같은 방안들이다. 소형 세미나 룸에는 간이 부엌 시설도 갖추어 방문객들이 토론과 ‘역사작업’ 중간에 커피와 다과를 즐길 수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것도 김수근의 건물과 대비하는 효과를 지닌다.

구체적인 건축 양식과 내장은 추후 그 방면 전문가들의 논의에 맡기고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시민교육의 전당을 지향한다면, 그것에 걸맞은 교육원칙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원칙을 실천할 건물과 공간에 대한 원칙도 미리 가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건물과 공간의 양식과 디자인은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10) 공공서비스: ‘방문객 친화’의 관점에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방문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자 한다. 박물관과 기념관은 전시를 넘어 교육을 비롯해 여타 시설과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의 요구와 편의에 맞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의 관점, 정확하게 말하면 ‘방문객 친화성’(visitor orientation: 방문객 지향성)의 관점에서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¹²⁾ 심지어 ‘방문객’을 ‘고객(또는 소비자)’으로 규정해 마케팅 전략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되고 있다. 방문객을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나 교육 대상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행위자이자 박물관의 공동 참여자로 인정해야 한다. 방문객의 관점에서 박물관 방문을 그려 본 뒤 공공서비스의 시설과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12) Beatrix Commandeur and Hannelore Kunz-Ott and Karin Schäd (Hrsg.), *Handbuch Museumspädagogik: Kulturelle Bildung in Museen* (kopaed. 2016).

〈민주인권기념관〉은 전시와 교육 공간 외에 영상관과 도서관 및 문화(공연)관과 정보센터(자료실 내지 사료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의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되고 다기능의 복합 공간이어도 좋을 것이다. 도서관과 자료실과 정보센터는 방문객이 지적 관심을 더 키우고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도록 보조한다. 최근의 문화적 흐름을 반영해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 제공의 공간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차분히 살펴보려는 방문객들을 위해 도서관과 자료실(사료관)을 갖추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영상관을 통해 역사 다큐 시청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및 기억문화와 관련된 토론과 문화 행사도 개최해야 한다. 이때 예술과 문화 행사는 〈민주인권기념관〉의 취지와 사업에 조응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의 일부 역사박물관은 방문객을 끌어 들인다는 명목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특별한 맥락이나 연관성이 없는 이벤트성 문화 행사를 과도하게 진행한다. 그것은 피해야 한다. 예술적 재현과 문화 행사의 과잉은 때로 역사적 사실성의 아우라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문화와 예술 관련 행사는 상설 전시의 특정 주제나 기획 전시 또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해 사전에 잘 조율되어야 하고 〈민주인권기념관〉 내부에서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채택되어야 한다. 로비스트들의 활동과 연고에 의한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 방문객 친화적인 공간과 시설은 박물관 솜과 카페와 식당, 휴식 공간과 주차장, 심지어 숙박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현재 남영동 부지와 주변 환경의 제약으로 주차장과 숙박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주변 부지의 변화, 즉 용산공원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이 현실화될 때에는 새로운 접근과 활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도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단체 답사 탐방을 염두에 두고 <민주인권기념관>으로의 수월한 출입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민주인권기념관>은 방문객의 동선을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부대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물과 전시를 통해 얻은 감정의 동요를 달래거나 함께 온 방문객들과 생각과 느낌을 나눌 장소, 즉 추모나 휴식 공간, 또는 카페 정원이나 옥상 카페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 방문객들은 그 곳에서 홀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또는 소규모 그룹이나 단체 답사 방문객들의 경우, 그 곳에서 기념관의 전시와 교육에 대한 인상과 느낌을 나누며 작은 토론회를 가질 수 있다. 방문객들은 그런 공간에서 유사한 느낌과 생각이 흐르는 것을 마주하며 코뮤니타스(communitas)를 경험한다.

<민주인권기념관> 방문이 바쁜 일상에 덧붙인 또 하나의 급한 일정으로 끝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삶, 즉 비극적 과거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새롭게 만나는 장이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방문객들에게 일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을 성찰하고(판단 중지, 거리두기, 생각 검토, 자기 관찰과 관점 전환 등) 유사한 감정과 생각을 가진 타자와 일상에서는 잘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방문객들에게는 전시 못지않게 전시 관람 후 홀로 성찰하거나 타자와 함께 그 후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방문객 친화성’의 관점은 사회 소수자들의 ‘포용’(inclusion)을 위해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이주민들을 고려해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접근성’ 개념에 기초해 전시와 교육 공간을 구성하고 동선을 짜야 하며, 수월한 말로 마련된 안내와 설명문 및 보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기 또는 어린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의 상황도 고려해서 부대시설과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덧붙이면, 이 모든 원칙과 필요 때문에라도 현재의 테니스장 부지는 적극 활용될 수밖에 없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도심 가운데의 협소한 부지에 건립되는 것이기에 더욱 더 방문객의 동선과 공간의 쾌적함에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커피도 더 맛있는 게 좋고 위생도 더 좋아야 한다. 박물관 속에서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독특한 물건들 둘러보고 기념품을 사는 즐거움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 경험들은 모두 다시 사람들에게 ‘남영동’에 대한 주체적 기억을 만든다. ‘남영동’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자신의 이야기로 스며들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세계의 주요 기념박물관은 ‘방문객 친화성’을 높이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기념박물관은 이미 그 자체로 인권유린 역사의 비극적 무게가 내려앉은 곳이다. 비탄과 비장감이 발현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감정과 정서를 보듬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기억과 소통을 과도하게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정의 과잉이나 집단 감정의 강제로 다양한 질문과 생기 있는 토론이 막혀서는 곤란하다. 역사박물관은 무엇보다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방문객들의 소통을 가교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민

주인권기념관>은 소통의 다양한 방식과 차원을 고려한 시설과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976년 김수근의 건물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부정하고 인간적 신뢰와 친교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맞선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의 신축 건물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대화와 친교의 공간들로 넘쳐나야 한다. 사실 순전히 그 이유만으로도 쉼터와 친교의 공간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폭력과 고통의 장소를 인간적 상호작용과 신뢰의 장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모든 차원과 영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를 문화적으로 실험하며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그것이 남영동의 ‘두 번째 역사’가 가야할 길이다. ~~54~~